

환경단체 “나머지 보도 철거”...농민들 농업용수 부족 우려

4대강조사위 영산강 죽산보 해체 결론 지역 반응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영산강·금강 5개 보 중 3개를 해체·부분 해체하는 방안을 지난 21일 제시하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수 백억 원에 달하는 해체 비용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 죽산보 이어 승촌보도 해체 결정 내려야=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등 지역 3개 환경단체는 공동 논평을 내고 “4대강 수문개방에 이어 죽산보 등 해체를 결정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가장 진척된 정부 조치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전·현 정부에서 공식 확인됐음에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승촌보에 대해서는 해체가 아닌 상시 개방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승촌보는 보 구조물이 영산강의 3분의 2를 막고 있어 퇴적 오니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오염원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보 구조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또 승촌보는 상류에 하수처리장이 있어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고 물 확보도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홍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촌보·죽산보 해체, 영산강 하구둑 해수유동통을 통해 영산강의 자연성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천억 들여 만들어놓고 다시 해체하는 데 수백억 ‘예산낭비’=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경제성 분석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에만 2000억 원 가깝게 투입된 이들 3개 보를 다시 900억 원이나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죽산보의 건설 비용은 599억원, 해체 비용은 250억원(추정)이다. 세종보는 건설비 150억원에 해체비 114억7000만원, 공주보는 건설비 1051억원에 부분 해체비 532억8000만원이다.

해체로 얻을 수 있는 편익비용은 죽산보 1580억 3000만원, 세종보 971억 9000만원, 공주보 1230억 6000만원으로, 이를 보 해체 비용으로 나누는 경제성 분석을 따져보면 각각 2.54, 2.92, 1.08 수치다.

“수천억원 들여 만들어 놓고

수백억원 들여 해체”

일부 예산 낭비 반발도

환경부 “해체가 이익 커”

경제성 분석에서 1 이상은 이익, 1 이하는 손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 분석에서 보 건설 비용·보 유지에 따른 편익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기획위원회가 3개월 만에 3개 보 해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기획위 민간위원(43명)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하면 16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해체하는 게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홍수 조절 능력·물 활용성 등 보 건설에 따른 혜택은 경제성 분석에서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2017년 6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모니터링한 실측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가 조사·평가했기 때문에 성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고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 부족 우려=환경단체와 달리 영산강 주변에서 작물을 키우는 농민들은 보 해체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주 농민 김모(여·65)씨는 “보를 터버리면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야”며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놓은 보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피고 내린 결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들일에 나선 이웃들도 “수문이 달려있으니 필요할 때 여닫아도 될 텐데 기껏 지어놓은 걸 다시 부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대체로 비슷한 걱정을 드러냈다.

공주시와 세종시에서도 일부 농민들이 농업 용수 부족을 이유로 철거 반대 입장을 문을 발표하거나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지난 24일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죽산보 아래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망언 의원 퇴출·왜곡 처벌법 제정”...서울서 1만여명 규탄 집회

광주·전남 1500여명 상경

5·18시국회의 범국민대회

인근서 보수단체 항의집회

최근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출과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시국회의와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광주·전남에서 상경한 이들을 포함해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

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권 인사들도 이날 집회에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제명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의 학살이 망언의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통하고 분하지만 이미 모두를 용서했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는데, 때만 되면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피해자와 시민들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주의는 관용을 베풀지만 그 자체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에게까지 관

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분노에 함께하고, 이런 일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은 시국회의 공동대표는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 3명을 두고 “이들의 망언은 5·18 모독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한국당이 이들을 퇴출하지 않으면 한국당 해체 투쟁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로부터 이른바 북한군 ‘광수’로 지목된 광주 시민도 이날 발언자로 나서 역올함을 호소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박희성 씨는 “나는 군대를 만기제대했고 두 아들도 모두 만기제대했는데 내가 왜 북한군인가”

라며 “이들의 망언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본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을 돌아 세월호 분향소까지 행진했다. 앞서 본집회 시작 전 열린 사전집회에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망언세력을 비호한다”, “언론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지만원 씨는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집회 시작 전 청계광장 맞은편 도로에서는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이 물려와 참가자들을 향해 고성과 폭언을 쏟아내다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 경비병력 2800명을 배치해 양측을 분리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용희 기자 kimyh@연합뉴스

여야 3당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2일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

만 그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술,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1조 2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128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영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셈이다. 발의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당 출신으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5·18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QR code and text: **에너지**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층 농장 임대비)
-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